

한국축산은 지금 어떻게 요리되고 있는가 ?



김 성 훈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장,
농업경제학박사)

1. 수순(手順)을 그린 농정

빈약한 부존자원과 과잉 인구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제운용방식이 아우트르키적 폐쇄형 자금자족체제가 아닌 대외개방의 길을 선택한 것은 성장지향정책의 필연적인 수순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내경제의 내실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먼저 자기쪽의 약한 곳을 사전에 보강해 두지 않고 지나치게 대외공세 일변도로 나가다보니 마치 꼭 지켜줘야 할 기본요석(基本要石)이 몰살의 위기에 직면한 끝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농업·농민·농촌경제가 수입개방에 몰려 위태로워진 현상에 비유된다는 점이다.

오늘날 우리경제의 고도성장 배후에는 자생력을 미처 갖추지 못한 농어촌경제가 지금 대내적으로는 상업농화, 대외적으로는 수입개방이라는 두 장벽에 끼어 운신의 폭을 넓힐 길이 없어 파탄 직전에 놓여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제5공화국정부 들어선 이후 추진된 제5차 및 6차 5개년 계획은, 드러내 놓고 주곡농업에 대하여서는 가격지정정책을 철회하는 대신 "복합영농"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대안과 더불어 상공업지역 개발정책에 해당하는 농촌공업화 시책을 마치 정통 농업소득정책의 대안인 양 밀고 나왔다. 농산물 수입개방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전제된 시책방향이었으나 정작 상업농화·수입개방농정의 전제조건인 생산기반의 확충, 유통안정 및 가격지정정책의 고도화, 저장, 가공, 판매 및 생산자재 산업의 농민지주관리화, 그리고 농민단체경제활동 등 민주화에 대하여는 이렇다할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렇듯 대내경제국면의 운영에 있어 수순(手順)을 그린 결과는 지난 6년 사이 농가부채 6.5배 증가라는 단군 이래 초유의 농촌경제위기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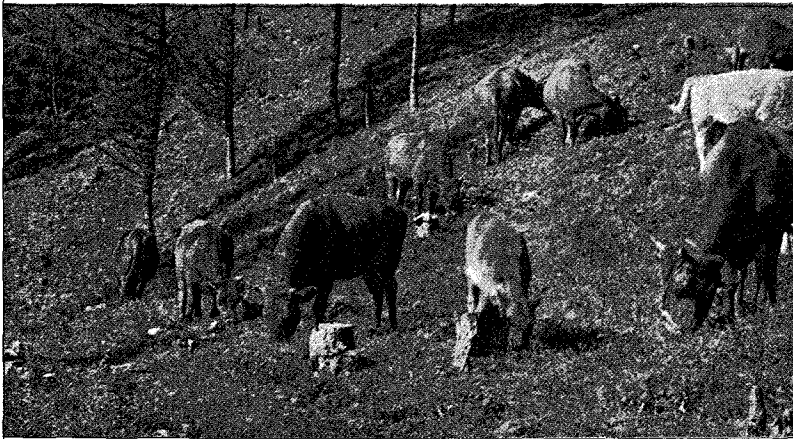
저노임을 이용해 공산품을 수출하여 재미보는 사람이 따로 있고 농산물을 수입하여 한 몫 쥐는 층이 따로 있는데, 농민계층만 제도적으로 고립무원 살 길이 막혀 몰락되어간다면 농민의 저항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입자유화율은(가공음식료 포함) 87년현재 80.1%에 이르렀다. 정부가 이미 미국측과 약속한 대로 88년도에 19개 수입감시품목제도를 폐지할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냉동감자등 농산물품목이 추가 개방될 추세이다. 특히 쇠고기, 냉동감자, 포도 등의 수입자유화는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다. 농민인들 수입자유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문제는 수입자유화를 하면서도 농민을 살릴 수 있는 대도도 있고 열길도 수없이 널려 있는데 정책당국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무지의 소산인지 정

다. 국내 돼지고기값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사정이야 기업이윤을 앞세우는 재벌상사에게는 아랑곳 있을 턱이없다. 그러니 자연 너도나도 뒤질세라 20여개업체가 돼지고기, 닭고기, 통조림 수입에 달려들고 있다. 지난해 7월엔 서울, 경기지역 낙농가 3천여명이 서울우유협동조합에 모여 정부의 우유생산조절 계획안과 날로 늘어가고 있는 유제품의 수입, 그리고 모 그룹이 뉴질랜드 낙농공사와 합작으로 치즈원료를 수입해 재가공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반대하며 격렬한 가두시위까지 벌였다.

선진국에 비해 별로 생산이 많지도 않은 우리나라에 우유가 남아돌아 송아지에 먹고도 썩혀지기 직전에 놓여 있는 것은 그간 사료용분유(전지, 탈지)의 과도도입과 공업용 유제품으로 도입된 분유의 식용전용 등 때문이다. 그런 마당에 외국산 치즈원료를 주로 사용하는 치즈합작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나선 모그룹의 대담성을 보고 내노라하는 여타 재벌유가공업체도, 그렇다면 우리도 같은 조건으로 구미각국의 치즈도입가공을 하겠다고 서들

렸다. 수출을 많이 했으니 수입도 많이 하라는 주장은 확실히 일리가 있다. 그러나 저노임을 이용해 공산품을 수출하여 재미보는 사람이 따로 있고 농산물을 수입하여 한 몫 쥐는 층이 따로 있는데, 농민계층만 제도적으로 고립무원, 살 길이 막혀 몰락되어 간다면 농민의 저항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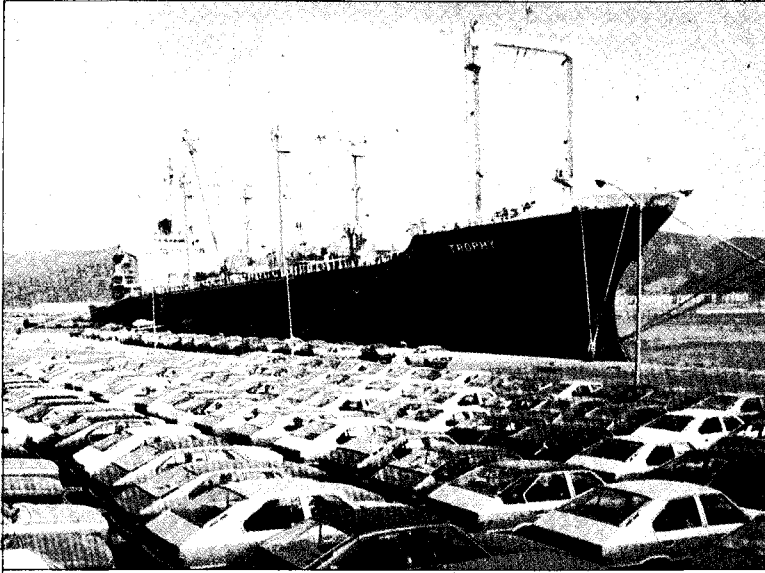


2. 수입개방의 딜레마

제5공화국이 들어선 이래 급격히 추진된 수입자유화 조치는 무역대상품목 8단위(총 7915품목)를 기준으로 1977년에 자유화율이 약 50%이던 것을 83년엔 80.4%, 그리고 87년에 93.6%로 높였고, 정부방침에 의하면 88년까지 95.4%로 올릴 계획이다.이 가운데 농축수산물 수

경유착의 결과인지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고쳐야 할 정책기조와 수출입제도, 농어민대책이 계속 빚나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바람에 재벌들만 살판이 났다. 특히 두차례의 수입개방조치로 돼지고기통조림 등 육가공품의 수입이 자유화되자마자 즉각 어느 식품재벌은 유럽제품 통조림 수입을 번개처럼 독점계약했



3. 왜곡된 수입정책

87년초 한·미통상회의차 우리나라에 들렀던 미국관리 한 사람과 만나 나눈 이야기는 사뭇 교훈적이다. “왜 감자마저 수입하라고 하는가? 우리나라 강원도 농민들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전농가의 생계를 걸고 고생하고 있는지 아는가? 그나마 국내수요도 별로 안 되어 해마다 생산량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니 그 미국관리가 대답하길 “그것 참 이상하네. 네 나라 모 식품 재벌의 호소에 따르면 포테이토칩, 프렌치프라이 등 국내시장은 얼마라도 있는데 정부의 수입제한조치 때문에 못들어 온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멀잖아 이 냉동감자도 수입 자유화가 될 것임을 물론이다.

이상에서 보듯 우리 재벌은 원료 형태이건 반제품 또는 완제품형태 이건 불문하고, 이익이 남는 것이면 국내 농민·농업이야 어떻게 되든 그것도 되도록이면 독점수입하려 한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 공산품의

수출이 늘면 늘수록 수입도 그만큼 해주어야 하는데 불똥은 죄없는 농축수산물에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수입된 농축수산물 및 가공제품의 국내가격의 차익은 거의 대부분 재벌에게 귀속되고 있다. 소비자는 여전히 비싼 식품값을 지불하며, 다른 한편 국내농업 생산성을 높일 기회를 계속 박탈당한 채 생산기반만 소리없이 무너져간다.

수입된 농축수산물 및 가공제품의 국내가격의 차익은 거의 대부분 재벌에게 귀속되고 있다. 소비자는 여전히 비싼 식품값을 지불하며, 다른 한편 국내농업 생산성을 높일 기회를 계속 박탈당한 채 생산기반만 소리없이 무너져간다.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떠한가. 일찍부터 유럽경제공동체(EC)각국은 자국의 농민·농업보호를 위하여 미국과 일축즉발의 무역전쟁을 하면서까지 농축수산물 수입을 억제하고, 수입할 경우 그에 따른 관세와 거기에 다시 수입과징금을 부과한다. 관세와 과징금, 그리고 가능

하면 생산자 지향의 단체로 하여금 수입하게 하여 국내가격과의 차액까지 한데 모아 자국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수출에 재투자한다. 그 결과 오늘날 EC각국과 심지어 만성적인 수입국이었던 영국마저도 국제시장에서 미국농산물보다 국제경쟁력이 높아졌을 정도이다. 소맥이 그렇고 각종 축산물이 그렇다. 일본도 비슷하다. 정규 정부예산으로 자국농업부문의 생산향성향상에 집중투자한다. 밀 하나를 예로 들더라도 한때 자급율이 2~3%였던 것이 지금은 18%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콩은 3개의 독과점 대두(大豆)가공업체가 애초부터 마음대로 수입해서 재미를 구가하고 있다.

소량의 콩나물과 두부용만 농협과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나누어 수입할 뿐이다. 몇해전 농촌진흥청 산하의 맥류연구소에서 한국포도에 맞는(미국산에 뒤떨어지지 않는)양

질의 밀품종을 개발한 바 있었다. 그리하여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정부당국에 종자확보용만이라도 수매 해주자는 안을 냈던 전남지방 책임자는 당시 세도가 찌를 듯한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모르는 건의라고 꾸중만 호되게 들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지원과 생산기반 조성만 잘 뒷받침된다면 고가의 농산물을 오히려 역수출하지 못하란 법이 없다고 본다.

4. 수입개방정책의 정식

이제까지의 농산물수입자유화 조치를 보면 경직된 관 주도의 수입 제도를 예컨대 일본식의 유연한 행정지도방식으로 바꿀 줄 모른다. 몇 마디 압력으로 한국만큼 쉽게 열어 주는, 아니 열 수 있게 되어 있는 체제 역시 문제이다. 허물며 값싼 외국 농산물이 수입되어 국내가격과의 엄청난 차익을 고스란히 수입상사나 독과점적 가공업자가 독식하는 현상마저 방치되고 있지 않는가?

우리나라 정책입안자들은 크고 작은 대담한 것은 잘 해내어도 섬세하고 미묘한 부분을 처리하는 데는 아주 거친 솜씨를 보이는 것 같다. 히트작품은 잘 만들어내어도 감춰진 민생문제, 잘 알려지지 않은 섬세한 대책에는 둔감하다는 뜻이다. 호쾌한 듯한 몇마디로 애련한 농어민의 가느다란 희망마저 싹뚝 잘라버리고마는 정책발상들이 우리나라 정책당국에 판을 치고서는 경제민주화도, 노동자문제도, 농어민문제도 어느 하나 해결해 나갈 수 없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그동안 있던 수입개방 조치에 따라 수입자유화율은 94%에 이르렀고 농수산물의 경우 매년 5백여가지가 넘는 품목으로 20억불 이상이 수입되고 있다. 사실인즉 수입이 급



지된 품목, 예컨대 외국산 과일과 가공품이 버젓이 일류백화점에서 지금도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도 농민들에게는 수입개방을 활용할 그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왜곡된 현재도를 고칠 줄 모른다.

네덜란드의 농업이 당초 국제경쟁력이 높았기 때문에 국토의 3분의 1의 바다를 메워 옥토로 일구었고, 스위스의 산악농업과 덴마크의 불모지농업이 당초 생산성이 높아서 낙농초지와 포도밭으로 가꾼 것이 아니다. 더구나 신생 이스라엘의 농업이 국제적으로 비교우위가 높아서 사막과 늪지대를 개간하여 과일과 꽃농사를 발전시킬 것도 아니다.

농업을 국민생존의 최소 기본요건으로 국민 모두가 공동으로 인식하여, 우선 EC나 영국과 마찬가지로

로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재배기술을 높여 국제시장에서 몇몇이 경쟁할 수 있게 하고, 작은 나라, 좁은 농토, 과잉인구의 농업에 있어서 그 나름의 경쟁력을 키워갈 길이 있는 것이다.

주의에 일본이라는 방대한 농산물 수출시장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들 나라보다도 더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자동차, 전자제품을 만들어 파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리나라가 정부의 정책지원과 생산기반 조성만 잘 뒷받침된다면 고가의 농산물을 오히려 역수출하지 못하란 법이 없다고 본다.

영제

※ 본 글은 전환기의 한국농업·농민문제에서 강의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